

몸집 줄여 경영효율 높이고 추가 투자유치 속도내기

광주형일자리 완성차 공장 초기 투자규모 왜 줄었나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 (이하 완성차공장)의 투자규모를 7000억원에서 1255억원 감소한 5745억원으로 확정한 것은 공장 설립 초기 투자수익률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치다. 10만대 생산 계획 등 큰 틀은 유지하면서 초기 투자금을 줄여 완성차공장이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에 따른 변화다.

특히 이번 투자규모 축소 과정에 완성차공장의 설립 3대 원칙을 ▲디지털 ▲친환경 ▲유연성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완성차공장이 초기에 생산하는 SUV 경차에 머물지 않고,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장 설립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친환경, 유연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은행이자·市 재정 부담 줄여
일반투자금 300억원 감소

공장 설립 3대 원칙
디지털·친환경·유연성 설정
전기·수소차 생산 전환 쉽게

에서 437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 은행에서 차입해야 하는 타인자본도 4200억원에서 3452억원으로 748억원 감소했고, 이에 따라 748억에 해당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유지해야 하는 일반투자금도 감소해 부담을 덜었다. 애초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1680억원의 투자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1380억원으로 300억원가량 일반투자금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공장의 투자금·차입금 조달과 지역기업·현대차 하청기업 등이 대상인 일반투자자 모집도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다.

◇친환경차 전환도 가능한 구조=완성차공장은 계획 단계에서 "향후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이 급변할 텐데 SUV경차 생산만으로는 시장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완성차공장들이

어서는 광주 빛그린산단에 조성되는 친환경 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투자규모 축소 과정에는 친환경차 전환이 가능한 완성차공장 설립 3대 원칙도 공개됐다. 모든 공정을 '디지털·친환경화' 하고 언제든 다른 차종을 생산할 수 있는 '유연성'을 고려해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대전직이 자리를 잡았다. 완성차공장이 우려했던 SUV경차만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친환경자동차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게 설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과 공장 설립 작업도 순조롭다. 광주시는 29일 시청에서 광주은행과 완성차공장 투자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완성차공장에 100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대출 지원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광주시, 현대차를 제외한 외부기관 첫 투자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투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기간 투자자 간 최종 협약을 체결하고, 신설법인의 정관 작성과 이사·감사 등을 선임하게 된다.

또 올 상반기 공장부지를 매입한 뒤 12월께 착공식을 연다. 공사기간은 21개월가량 예상되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21년 하반기에는 완성차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광주은행 투자의향서 전달식'에서 송중욱 광주은행 은행장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전달 받고 있다.

반기문 "한국 미세먼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충격"

'미세먼지 기후환경회의' 출범
42명 국민정책참여단 구성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당,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종교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표하는 당원직·위촉직 4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각계각층 국민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반 위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공익에 기여하는 생을 살아온

제가 다시금 범국가적인 과업을 완수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며 "내 남은 인생을 기꺼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OECD 회원국 도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100개 도시를 추린 결과 한국 도시 44곳이 포함됐다는 최근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중국, 인도 등이 빠진 통계라고는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충격을 받았다."

국가적인 위기"라고 토로했다. 반 위원장은 "전 국민 개개인께 읍소한다"며 "이제는 '내가 손대다', '우리 산업계가 손대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 42명 중에는 정당 추천 인사 5명도 포함되지만, 최근 국회 대치 상황으로

인해 아직 위촉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나. 여야 모두 공기는 마셔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내가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전 세계 비판을 받았다. 단련이 돼 있다"며 "비판은 내가 모두 받겠으니 그야말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미세먼지 감축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음 달 중 500명으로 이뤄질 국민 정책참여단 구성에 착수해 국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은 뒤 속의 과정을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가 오기 전에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올 5·18기념식 참석할까

청와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황교안 대표 참석도 관심
조사위 출범 전엔 어려울 듯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38주년 기념식에 불참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는 점에서 이번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한 번도 빠짐없이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2년 연속 불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 파동으로 상처 받은 광주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현직 대통령으로서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가 하면 아버지

추모 편지를 읽으며 흐느끼는 유가족을 안아주는 진정성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바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이번 기념식에 참석, 다시 한 번 5·18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5·18 진상규명 위원회 출범을 실질적으로 비토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보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강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지난 2년 동안 5·18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18 진상규명 위원회가 출범, 숨겨져왔던 진실이 어느정도 실체를 드러내는 40주년 기념식에 문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5·18 민주화 운동 39주년 기념식 참

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대표로는, 2015년 김무성 전 대표 이후 4년만이다. 하지만 최종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숨 방망이 징계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5·18 진상조사위 구성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가는 박수보다는 욕설을 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참석한다고 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황 대표에게는 부담이다. 황 대표는 지난 2016년 국무총리 시절, 정부를 대표해 5·18 기념식에 참석했으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끝까지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상황이 변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도, 안 부를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대표 대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추경 늦어지면 민생 부담...정치권 대립 안타까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는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정부는 '세계 경제

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 기동해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지자체의 교부부담 전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천억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2019 목포 산정동 먹자골목 화재피해 이웃돕기 모금 및 지원 결과 공고

따뜻한 나눔 감사합니다!

올해 1월 7일 목포시 산정동 먹자골목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피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긴급모금을 실시했고 기업과 단체들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 여러분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목포시청과 박지원 의원실, 후원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성금 모금과 배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2019 목포 산정동 먹자골목 화재피해 이웃돕기 모금'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피해 이웃들의 아픔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모집 내역	지원 내역	모집 경비
모집 기간 2019년 1월 10일~2월 28일	전소 피해 (11세대) 2억1천135만34천원	모집 경비 914만717원
모집 금액 2억46천890만2천717원 (5762건)	일부 피해 (9세대) 4천834만18천원	(회계감사비, 신문광고비 등)
	합 계 (20세대) 2억5천176만2천원	
	지원 방식 피해자 계좌에 직접 입금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거한 공고입니다.
TEL. 1544-9595 | www.relief.or.kr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